



오송참사 언론보도의  
진실을 추적하다

# 참사 후 언론의 역할 그리고 보도윤리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the  
Media and Reporting Ethics  
After the Disaster

# Journalism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오송참사 언론보도의  
진실을 추적하다

## 참사 후 언론의 역할 그리고 보도윤리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the  
Media and Reporting Ethics  
After the Disaster

# Journalism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보고서를 펴내며

**2** 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의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차도에 밀려든 물은 17대의 차량을 순식간에 삼켰고, 그 결과 14명이 희생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지만, 누구도 구조 받지 못 하고 생사를 넘나들며 자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의 아픔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사건 초기, 언론은 이 참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참사를 다루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송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실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참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보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오송참사를 중심으로 언론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도의 프레임과 관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참사 보도에 수반된 혐오 표현과 2차 피해 문제를 함께 조명하며, 언론 보도의 윤리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사 해결이 지연되는 동안 재난의 서사는 점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회와 집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책임 있는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고통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언론 보도와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자신들과 오송참사가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수도권 참사에 비해 비수도권 소식은 빠르게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송참사 보도량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극적이고 가십성 보도로 참사를 도구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러야만 겨우 뉴스 말미에 얼굴을 내보입니다. 보도 비중도 줄어 대부분 단신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업화된 언론, 언론계 내부 관행, 네이버가 장악한 뉴스 유통 시스템, 지역과 지역 뉴스를 주변부로 소외시키는 한국사회의 인식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참사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도, 정치적·혐오적 논쟁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했듯, 언론은 참사의 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오송참사를 중심으로 언론의 사회적 참사 보도에 대한 관심도, 지역별 격차, 윤리성 등을 탐구하며 언론의 역할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오송참사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참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후의 대응과 기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시험합니다. 언론은 사건의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재난과 참사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촉발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참사 보도가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오송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4년 10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목 차

	5
1. 오송참사 보도 연구의 의의: 점점 줄어드는 보도에 관하여	14
2. 애도의 공동체 만들기에 언론은 기여하고 있는가	21
3.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26
4. 언론사별 보도 특성은?	29
5. 언론사별 주요 보도 주제는?	36
6. 프레임과 사회적 영향	39
7. 재난 보도에서의 시각적 요소 분석	44
8. 가십 혹은 감시? ‘웃는 공무원’ 보도 반응과 언론의 역할	51
9. 유가족과 피해자 비난 댓글 양상	55
10. 결론 및 제언	

## 1. 오송참사 보도 연구의 의의: 점점 줄어드는 보도에 관하여

**지**난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한 오송 참사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16명이 살아남았다. 유가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충북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현재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회의 국정조사도 여전히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사건의 진상규명이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들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기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 지하철도 참사 진상 조사 결과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 재난 위험 파악 실패, 부실한 하천관리와 재난 대응, 무기력한 대처 등이 낳은 참사”라며 “하천과 지하철도를 관리하고,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이 참사의 책임이 있다”(오윤주, 2024.4.24.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 최종보고 “상설적 재난 조사기구 필요”』, <<한겨레>>) 고 밝혔다.

오송참사는 예견된 ‘인재’ 이자 ‘관재’였다.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참

사 당일엔 지하철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 소방당국, 청주시, 충북도 어느 곳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딸이었던 이들이 토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여행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끔찍해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생존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가까스로 죽음의 현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참사 당시에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청주시와 충북도는 분향소 기습 철거 등으로 시민과 함께 애도할 권리마저 빼앗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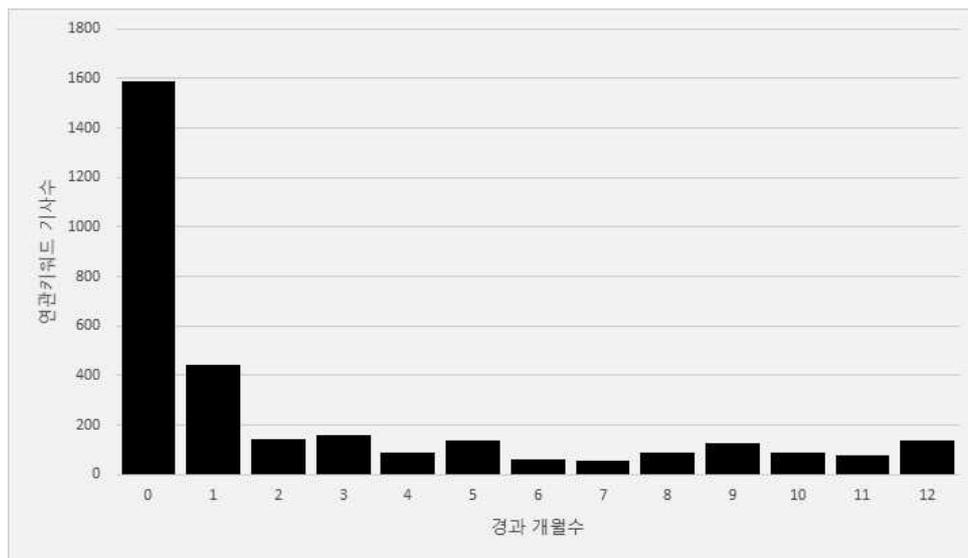
###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언론은 어떻게 다루나

지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언론들이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보도를 쏟아내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보도량이 줄어든다. 지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지만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다. 전국권 언론은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나 대형 재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나마 지역언론들이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편이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수도권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언론은 특보를 전하는데 인색하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해야 지역은 언론에 등장한다. 지난 2022년 폭우 피해가 컸을 때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서울에 폭우가 집중됐을 때만 보도량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보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금준경, 2022년, 『폭우와 태풍보도 정말 서울편중 심했는지 확인해보니』, <<미디어오늘>>) 신문만이 아니다. 방송도

태풍이 특정 지역에서 극심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면 태풍 중계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와 위력을 살피기 쉬운 방향으로 배치되어 뉴스로 생방송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재난보도에서도 지역은 수도권과의 격차와 차별을 당한다. 오송참사는 피해 규모를 봤을 때 대형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참사 초기에만 언론의 보도량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오송참사 같은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언론 보도가 다르지 않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오송참사 일주기 즈음에 만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지난 일년간 언론이 크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다. 참사 발생 당시 수천 건의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오송참사에 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송참사 보도량은 현저히 줄었다. 재판관련 소식이나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나 발표 내용 등을 제외하면 기획성 보도는 많지 않다. ‘현장을 찾은 공무원이 웃었다’거나 ‘악인 도지사’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극적, 가십성 보도에서만 도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송참사를 다룬 보도에 달린 일부 댓글에는 유가족에 대한 혐오의 정서를 드러내는 내용도 있다. 언론이 보도를 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국정조사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말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연월	경과 개월수	기사 총수	연관매체 기사수	연관키워드 기사수	누적 기사수
2023.07	0	478,116	67,406	1,588	1,588
2023.08	1	502,728	75,797	441	2,029
2023.09	2	488,543	73,224	141	2,170
2023.10	3	518,959	74,536	158	2,328
2023.11	4	522,314	76,511	90	2,418
2023.12	5	475,677	70,813	137	2,555
2024.01	6	818,963	61,969	62	2,617
2024.02	7	588,288	67,710	58	2,675
2024.03	8	700,475	78,398	91	2,766
2024.04	9	685,381	76,447	126	2,892
2024.05	10	651,272	76,510	91	2,983
2024.06	11	540,259	68,008	76	3,059
2024.07	12	622,786	77,199	136	3,195

우선, 참사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의 보도량은 총 1,588건에 달했다. 이 시기의 보도는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집중하며, 긴급 구조와 초기 대응의 문제를 조명했다. 특히, 연합뉴스와 KBS, MBC 등 주요 공영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보도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보도량은 사건의 시급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론의 초기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3년 8월로 넘어가면서 보도량은 441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참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초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당시 보도는 주로 유가족의 항의와 피해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그 빈도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9월과 10월에는 각각 141건, 158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참사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더욱 축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당시 보도의 대부분은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과 공무원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예컨대, 9월 한 달 동안 오송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141건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체 언론 기사 총수(488,543건)의 0.03%에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수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 11월에도 지속되었으며, 연관 매체 기사 수가 76,511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보도는 단 90건에 그쳤다.

이와 같은 보도량의 변화는 수도권 중심의 언론 보도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건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매체가 관련 뉴스를 다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권 언론에 비해 지역 언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비수도권 참사에 대한 보도량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4년 1월과 2월에도 뚜렷이 나타났으며, 당시 각각 62건과 58건의 핵심 키워드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4년 1월에는 연관 매체 기사 총수가 61,969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보도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는 주요 매체의 참사 보도가 단신 위주로 이루어지고, 가십성 이슈로 변질되며 참사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리하자면,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초기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보도에서 점차 관심이 멀어지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화된 언론 환경과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다음 파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재난 보도에 있어 윤리적 책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보도량 증대가 아니라, 재난의 맥락을 심도 있게 다루며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지역재난보도와 지역언론의 역할

오송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지켜보면서 언론의 참사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언론은 그 역할에 따라 사회적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참사 보도는 현장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는 익숙한데 사건 발생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재난보도에서 오히려 현상 자체에 대한 보도 보다 예방과 치유, 공동체 차원의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들이 더 필요하다며 재난보도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치유와 재건에 나서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수민, 2023년 신문과 방송 1월호, 『한국식 재난 □재해 보도에 대한 다섯가지 고민』)

지역사회가 참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고 재정비해 무너진 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한다. 지역언론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은 채로 살다가 참사가 발생했던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 형식적인 보도를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지역언론이 오송참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대형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 전국권 언론은 관심을 거두지만 그래도 지역언론은 관심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참사 보도가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책임을 따져 묻는 일에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참사를 지우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서둘러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했던 자치단체장들은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충북민언론은 오송참사를 중심으로 언론의 사회적 참사에 관한 관심도 및 지역별 격차 그리고 윤리성 등을 탐구하여 사회적 참사에 언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제와 프레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언론의 프레임 유형과 논조 결과를 조사하여 언론의 태도를 파악한 후, 이를 종합해 언론의 관심도와 흥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시각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충북민언론은 그동안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나 오송참사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다 범위를 넓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론보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격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오송참사를 다룬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보도량을 확인해 언론의 참사 관심도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오송참사를 전국권 언론들이 얼마나 보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지역 참사에 대해 전국권 언론이 어떤 보도태도를 보였는지, 보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편향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온라인 상 댓글을 수집해 어떤 프레임으로 참사를 둘러싼 혐오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유족-생존자가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트라우마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언만이 아니라 오송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피해를 지역사회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재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보도 방법은 무엇인지, 상처를 입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언론이 유가족과 피해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을 해봄으로써 사회적 애도에 지역언론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 2. 애도의 공동체 만들기에 언론은 기여하고 있는가

**유** 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신들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언론은 마냥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은 715오송참사기록단에 참여해 유가족과 생존자 인터뷰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다.<sup>1)</sup> 보도로만 접했던 오송참사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경험은 그 자체로 낯 것 그대로의 고통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언론의 참사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지만 그날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그들의 고통에 지역사회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언론도 사회적 애도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정보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을 연결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적 연결과 일체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그러나 사회적 애도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일체감을 강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사회적 애도는 시민들이 경험한 심리적 충격과 무력감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애도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1) 2024, 715오송참사기록단, <나 지금 가고 있어>, 고래실



첫째 희생자와 피해자가 나오는 관련 없는 타자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둘째,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셋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법제도의 변화나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김영옥, 2023년 1월호, 신문과 방송, 『참사 보도에 대한 학습능력 보여줬지만 사회적 애도 기여는 아직 부족』) 언론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회적 애도과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대형 참사 이후의 지역사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세월호 보도에서 배운 것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발생은 한국 언론사에도 잊지 못할 ‘참사’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기레기’ (기자 + 쓰레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세월호 당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정부발표를 확인도 없이 받아써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분통을 터트렸으며, 세월호 검색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으로 어뷰징을 노린 기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냈고, 피해자 보상 문제를 언급하거나 유병언 관련 보도를 쏟아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의 친구들에게 무분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영상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드러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희생자 사연 기사에만 급급했던 당시 상황과 정부 발표를 팩트체크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가족들의 분노를 접하고 현장에서 보도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일보>>, 2019.4.15. 『세월호 5주기... 그날 우리는 왜 ‘기레기’가 됐을까』)

### 재난보도준칙, 잘 지켜지고 있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라며,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보도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보도준칙 1장 목적)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보도준칙에는 공적 정보의 취급 부분에선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 최대한 검증할 것(재난보도준칙 제11조)와 취재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검증(제12조)하겠다는 다짐과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제15조)

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실제 이런 노력들 때문인지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한국언론이 학습능력을 보여줬다(김영욱, 2023, 신문과 방송 1월호)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현장기자들에게선 재난보도준칙이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22년 12월14일에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시 본 재난보도준칙’을 주제로 취재 기자들이 참여해 보도준칙과 현장 사이에서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참사 현장 취재에 나선 젊은 사회부 기자들이 재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데스크의 수직적 취재 지시에 따라 취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또한 정부의 언론 상대 브리핑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재난 상황에서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언론계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언론 윤리 감시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 보도나 선정적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자들이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재난 보도준칙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기자협회, 2022년12월16일 『재난보도준칙, 여러 한계에도 노력 수반된다면 희망은 있다』)

이태원 참사는 언론윤리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각각 트라우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혐오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재난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면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영상이나 뉴스에 대한 반복된 노출은 트라우마를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포뉴스, 2022년 10월31일, 『신경정신의학회·의사회,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예방 위한 성명서 발표』) 이후 언론은 무분별한 영상보도를 자제하겠다고 각 메인뉴스에서 선언했지만, 이미 참사 직후에 보도된 뉴스는 퍼질 데로 퍼진 이후였다.



### 3.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본** 연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궁평2지 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대상은 오송참사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사의 보도이며, 수집된 자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1년간의 기사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KBS 등 총 7개의 전국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 본문 내용, 기사 분류(사회, 지역 등), 출판 일자 등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여,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보도량 변화, 그리고 보도 주제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다. 연구 대상이 되는 기사들은 각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포털에서 수집되었으며, 기사에 포함된 프레임과 관련된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의 참사 보도 방식과 관심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 발생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의 1년간의 언론 보도이다. 이 기간 동안 보도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참사 직후의 긴급 보도부터 후속 보도까지를 포함한다.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기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 프레임의 변화, 보도량의 증감 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오송참사 보도 분석의 주요 대상 언론을 전국권 언론으로 한정된 것은, 수도권 중심의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흔히 중앙 언론이라 불리는 주요 매체들이 전국의 주

요 뉴스를 고루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언론이 수도권 중심의 뉴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가 전국적 담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전국권 언론의 보도 양상은 사회적 참사의 전국적 확산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뉴스 편향성은 참사의 전모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지역 피해자들의 고통과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전국권 언론이 오송참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여 지역 참사가 전국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송참사는 충청북도 청주라는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피해 규모와 사회적 여파는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는 수도권에서 벌어진 참사에 비해 언론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량과 관심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며, 수도권 중심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역성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전국권 언론을 대상으로 오송참사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이 참사가 지역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회적 참사가 전국적으로 기억되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오송참사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참사에 대한 전국권 언론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참사에 대한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었

는가 살핌으로서 언론의 관심 주제를 파악하고, 그 관심이 지역적 불평 등 구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탐구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뉴스 공급과 소비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전국권 언론의 보도 양상과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전국권 언론 보도의 변화를 통해 참사 이후 언론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참사에 대한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참사가 전국적 담론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국권 언론이 참사 보도의 중심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지역의 사회적 참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요 주제와 프레임을 탐구하고, 보도량과 보도 내용의 변화를 계량적·질적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방법론을 사용한다:

### 기사 데이터 수집

연구 대상이 되는 기사는 언론사별로 제공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수집되었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데이터에는 각 기사의 제목, 본문 내용, 기사 분류, 출판 일자, 언론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는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분석에 활용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참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 양상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보도 프레임 분석

수집된 기사를 통해 각 언론사가 설정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다. 프레임 분석은 참사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예: 책임 프레임, 피해자 프레임, 사건 프레임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각 기사 의 본문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와 논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기사가 참사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귀납적으로 도출한다.

### 보도량 분석

시간에 따른 언론 보도량의 변화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조사된다. 각 언론사에서 오송참사와 관련된 기사의 총량을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보도량 변화를 시각화한다. 사건 발생 직후의 집중 보도와 그 이후의 보도량 감소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언론의 관심도가 사건 초기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 주제 분석

기사의 주요 주제는 각 언론사의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제와 사건에 대한 논의로 파악한다. 이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 주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초기 보도가 피해자 구조와 사건 상황에 집중되었다면, 이후 보도는 사건의 책임 소재나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참사 보도가 사건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한다.

### 보도 주제와 지역성의 관계

본 연구는 전국권 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각 기사의 주제와 보도 방식이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성이 참사 보도의 주제와 접근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질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의 통합

연구는 질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통합하여 참사 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보도 프레임과 주제의 질적 변화와 함께, 보도량의 계량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참사 보도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변화와 그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참사 보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 4. 언론사별 보도 특성은?

###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초기 양상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며 초기 언론 보도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초기 보도는 대체로 사건 발생의 사실적 기록과 재난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규모와 구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 ◆ 사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재난 상황 전달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일과 직후의 언론 보도는 참사 현장의 혼란을 전달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2023년 7월 15일 "호우에 주택 침수"라는 제목으로 청주 오송 지역의 폭우와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와 구조 작업의 초기 대응 상황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실과 그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참사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같은 날의 보도에서 연합뉴스는 "청주 비닐하우스 침수"라는 기사를 통해 청주시 전반의 침수 피해 상황을 다루며, 오송참사와 같은 날 발생한 여러 피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다. 이 시기의 보도는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와 구조 활동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으며, 참사 원인이나 책임 소재보다는 재난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앞서 2023년 7월 14일, 연합뉴스는 "산업부 1차관, 폭우 대비 오송 생명과학단지 긴급 점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사전 대비에 관한 보도를 내놓았다. 이 기사는 참사 발생 직전의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오송 지역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음을 보도하였으나, 참사가 발생하면서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기사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보도는 참사 발생 후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에 그쳤으나, 정부의 재난 대비 및 대처 문제에 대한 여론의 형성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참사 직후 언론은 피해자와 생존자의 신속한 구조 작업과 관련된 보도를 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5일자 연합뉴스의 "차량 침수" 기사는 참사로 인해 차량 17대가 물에 잠긴 사실과 구조 작업의 현황을 전하며, 피해자 구조 작업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참사 발생 후 긴급 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나 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초기 보도는 사건의 충격을 전달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참사 발생 원인이나 재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보도는 제한적이었다.

#### ◆ 초기 보도의 한계

오송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건의 긴급성을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초기 보도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심층 분석보다는 피해 상황의 단편적 보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오송참사에 대한 초기 보도 양상은 사건 발생 후 첫 며칠 동안 사건의 긴급성과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언론이 참사 원인에 대해 추측하거나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참사 발생 며칠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기 보도의 양상은 재난의 전후 맥락을 다루기보다는 사건 자체의 긴급성과 혼란을 강조하는 데 그친 경향이 있다. 특히 전국권 언론의 경우, 참사 발생 직후에는 보도량이 많았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연합뉴스에서 현장 사진 한 장을 한 건의 기사로 출고해 보도 수가 많은 것이었다. 전반적인 보도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 언론사별 보도 빈도 분석

오송 참사에 대한 보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와 KBS가 전체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건 보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합뉴스는 전체 기사의 41.03%를 차지했으며, KBS는 23.72%를 차지했다. 이는 두 언론사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경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주력했음을 시사한다. 연합뉴스는 주요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빠른 속도로 뉴스를 배포하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재난에 대한 공공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9.05%), 한겨레(8.14%), 중앙일보(7.14%)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아일보(5.48%)와 조선일보(5.45%) 역시 제한된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편집 방향과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 5. 언론사별 주요 보도 주제는?

**이** 번에는 2023년 7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룬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다. 재난 보도는 언론사별로 사건의 성격, 피해 규모, 원인 분석, 책임 소재,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재난이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을 때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사건이 공론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대응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오송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적·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각 언론사가 어떻게 사건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보도 경향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난 보도에서 언론의 프레임은 사건의 해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 차별화된 보도 프레임이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오송 참사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언론사의 대표적인 기사들을 데이터셋에서 추출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의 보도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언론사별로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이 사건의 해석과 공론장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분석 대상이 된 주요 언론사는 연합뉴스, KBS,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이며, 각각의 기사는 제목, 본문, 보도 시기, 언론사, 보도된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각 언론사의 보도 빈도 및 기사 분포를 통해 양적 경향을 분석하고,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언론사별로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각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핵심 단어가 모든 매체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 이는 사건의 발생 장소와 피해 규모가 각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 언론사에서 주목한 다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 ◆ 연합뉴스와 KBS는 "재난", "대응", "긴급"과 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매체가 사건의 전개와 긴급 대응 조치를 빠르게 보도하며, 국민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 ◆ 연합뉴스는 전형적인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건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보도 프레임은 "피해 규모의 전달"과 "정부의 대응 상황"이었다.
- ◆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및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에 주력하였다.
-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책임", "안전", "재발 방지"와 같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사건의 원인 분석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했음을 시사한다.
- ◆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피해", "사고", "명령"과 같은 키워드를 다루며, 피해 현황과 정부 명령에 대한 보도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언론들은 정부의 대응과 사건의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보도 방식을 보여준다.

##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 분석

### ◆ 연합뉴스: 정보 제공 및 중립적 보도

연합뉴스는 재난 보도 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중립적 보도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행 번호 1에 위치한 기사 "산업부 1차관, 폭우 대비 오송 생명과학단지 긴급 점검"에서는 산업부의 긴급 점검 활동을 보도 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이 폭우 대비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연합뉴스는 사건 발생 후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 KBS: 공공 안전 및 복구 노력 강조

KBS는 공공 안전과 재난 관리에 대한 프레임을 강조하며, 구조 활동과 복구 노력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행 번호 1362의 기사 "충북 전역 호우경보...2명 숨지고 침수 피해 속출"에서는 호우 경보와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상세히 다루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충북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다수의 차량이 고립된 상황이다.”

또한, 행 번호 1363의 기사 "충북 전역 호우 경보...지하차도 침수로 1명

사망"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를 통해 공공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경향신문: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강조

경향신문은 재난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행 번호 1230의 기사 "충북 청주 지하철도 폭우로 차량 10여대 고립...30대 남성 심정지"에서는 지하철도 설계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충북 청주 지하철도의 지하철도 폭우로 인해 차량 10여대가 고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3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하철도 설계의 미흡함과 유지보수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행 번호 1231의 기사 "폭우 사망·실종 30명 넘었다...오송 지하철도에는 최소 27명 고립"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미흡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였다.

◆ 한겨레: 인권과 사회적 연대 강조

한겨레는 재난을 인간적 관점에서 다루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보도를 진행하였다. 행 번호 1120의 기사 "청주 오송 지하철도 차량 고립 시민 1명 숨져"에서는 피해자의 인권과 구조 작업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고립된 시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조대의 수색·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행 번호 1121의 기사 "오송 지하차도 수색·구조 난항...1명 사망, 9명 구조"에서는 피해자 구조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의 인권과 복구 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재난 속에서의 인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명하였다.

#### ◆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부 대응 및 정책 평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정책과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행 번호 981 "오송 지하차도서 차량 10여대 고립...사망자 1명 발생"에서는 정부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차량 10여대가 고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였다. 정부의 긴급 대응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의 행 번호 774 "오송 지하차도 폭우로 차량 10여대 고립...1명 사망"에서는 정부의 대응 절차와 정책의 적절성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폭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10여대가 고립되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난 대응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행 번호 881 "[충청]청주 미호강도 범람...인근 굴다리에서는 차량 고립"에서는 재난 발생 원인과 정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보도

를 통해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정부의 재난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향후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동아일보  PICK 

## 오송 지하차도 폭우로 차량 10여대 고립...1명 사망

입력 2023.07.15. 오후 4:32 수정 2023.07.15. 오후 4:33 기사원문

 7  17
    



폭우가 쏟아진 충북에서 지하차도를 지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차량에 있던 사람이 숨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0여대가 인근 미호천 물이 넘치면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소방본부 구조대 등이 출동해 10여 명을 구조했지만 A씨(31)가 숨진채 발견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궁평1지하차도에서 3명을 구조했고, 궁평2지하차도에서 8명을 구조했다”라며 “아직 몇 대의 차량이 더 있는지와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잠수부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아직 2~3명 가량이 대피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보도 철학과 편집 방향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프레이밍하였다. 연합뉴스와 KBS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공공 안전 강조를 통해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반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정책과 대응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갔다.

차별화된 보도 경향은 언론사의 성격과 편집 방향에 따라 재난 보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론사별 프레임의 차이는 공론장 내에서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고 논의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각 언론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언론이 재난 보도를 통해 공공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공론장에서 사건이 해석되고 대응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재난 이후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오송 참사에 대한 주요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사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어떠한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는지를 규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이 공론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재난 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할 것이다.

## 6. 프레임과 사회적 영향

**해** 외 언론의 재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국 언론은 재난 보도에서 상이한 프레임을 채택하며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의 이태원 참사 보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사회에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오송 참사에 대한 한국 전국권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그 프레임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 '왜'에 집중하는 구조적 원인 분석 프레임

해외 언론은 재난 보도에서 '왜'에 집중하며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의 경우,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사고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재난 관리 체계의 결함과 정부의 대응 실패를 보도했다([해외 언론의 이태원 참사 보도 미국] '...').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사건의 피해 규모나 긴급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 발생의 배경과 구조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오송 참사 보도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 분석 프레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미호강 제방 관리 소홀과 재난 대응 체계의 실패를 지목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들 언론은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동시에, 사건이 사회적 불평등 및 지역 간 격차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다. 이러한 보도 프레임은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제의 결과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재난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한다.

#### ◆ 피해자 중심 보도와 인간적 존중

영국 언론의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다. 영국의 BBC는 참사 발생 이후, 사건의 원인 분석과 더불어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해외 언론의 이태원 참사 보도 영국] 최...).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참사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며, 단순한 통계적 접근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감정적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영국 언론은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통해 참사가 단지 숫자로 표현되는 비극이 아니라, 실제 삶을 잃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건임을 부각시켰다.

한국 언론에서도 일부 매체는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시도했으나, 대부분의 보도는 초기 피해 상황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오송 참사 보도에서는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사건의 본질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참사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 ◆ 혐오 표현과 자극적 보도 지양

일본 언론의 이태원 참사 보도는 혐오 표현을 자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NHK는 참사 현장을 재현한 모형을 사용해 사건의 물리적 조건과 사고 원인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며,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했다([해외 언론의 이태원 참사 보도 일

본] 혐...). 이는 참사 보도가 자극적인 감정 유발이나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며, 사건을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일부 언론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 헤드라인과 정치적 논쟁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참사 현장에서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책임 논의가 사건의 구조적 맥락을 벗어나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는 단기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쳤다.

#### ◆ 사회적 담론 형성과 공론장의 역할

언론 보도 프레임은 사건이 공론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논의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과 영국 언론의 사례에서 보듯, 재난 보도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한국 전국권 언론은 오송 참사 보도에서 사건 발생 초기의 긴급성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적 원인 분석이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공론장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오송 참사 보도에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각 언론사의 성향과 편집 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언론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난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다. 한국 언론이 이러한 점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재난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7. 재난 보도에서의 시각적 요소 분석

한겨레 구독 PICK

### [영상]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 수색...물 유입 막으려 안간 힘

입력 2023.07.15. 오후 4:41 · 수정 2023.07.15. 오후 11:03 기사원문

오윤주 기자

61 157 가 가 가

| 차량 19대 고립 추정...10명 구조됐지만 1명 사망



**재**난 보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중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진 기사는 텍스트보다 즉각적인 시각적 충격을 제공하여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

한다. 본 연구는 오송참사 보도를 분석한 데이터에서 사진 기사의 비율을 살펴보고, 사진 기사의 다량 보도 이유와 그 사회적 효과를 장단점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3,195개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567개(약 17.75%)가 사진 기사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론이 재난 보도에서 시각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진 기사의 다량 보도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재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사진보도 대부분은 연합뉴스 발 사진 기사로 연합뉴스 기사가 전체 보도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량 보도된다. 첫째, 시각적 충격의 즉각성 때문이다. 사진은 재난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독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빠르게 이끌어낸다. 이는 재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독자의 관심 유도이다. 텍스트보다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 기사가 독자의 시선을 더 쉽게 끌며, 클릭률과 조회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언론은 이러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재난 보도의 상업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정보 전달의 명확성 때문이다. 복잡한 설명 없이 재난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재난 현장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진 기사는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다.



(청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3.7.16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사진 기사는 재난 보도에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1) 사회적 경각심 고취; 2) 정책 변화 촉구; 3) 피해자에 대한 공감 유도이다. 사진은 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며, 재난 구호 활동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구독

## 도보수색 준비하는 대원들

입력 2023.07.17. 오전 1:00 · 수정 2023.07.17. 오전 1:01 · 기사원문

 최재구 기자

추천 댓글

🔊 🔗 📄 🔒



(청주=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해양경찰 대원들이 도보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2023.7.17

이 때문에 사진 보도 등 시각적 자료는 재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대중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재난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은 대중에게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사진 기사는 부정적 효과 또한 지니고 있다. 1) 감정적 피로와 무감각 유발; 2) 윤리적 문제; 3) 재난의 본질 왜곡이다. 지속적인 시각적 자극은 독자들에게 감정적 피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난에 대한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 보도가 반복될 경우 독자들은 처음의 감정적 반응을 잃고, 점차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진 기사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재난 보도에서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이나 고통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기사는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만, 재난의 구조적 원인이나 문제를 깊이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재난의 원인 규명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보도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재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 기사는 재난 보도에서 중요한 시각적 자료로 작용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재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지나친 시각적 자극은 감정적 피로와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 침해나 재난 본질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진 기사를 포함한 재난 보도는 대중의 주목을 이끌면서도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정책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8. 가십 혹은 감시? ‘웃는 공무원’ 보도 반응과 언론의 역할

**재**난 보도는 언론의 핵심적인 사회적 역할 중 하나로,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사건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재난 이후의 사회적 반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2023년 오송 참사 당시, 참사 현장에서 공무원이 웃는 장면을 보도한 기사와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언론의 재난 보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고, 저널리즘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신뢰와 공공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재난 보도는 언론이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보도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송 참사 보도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이 동시에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공무원 비판과 언론 프레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재난 보도의 윤리적·사회적 측면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

언론이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도할 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면 대중의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히죽히죽 웃는 충북도청 국장"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공무원의 행동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공무원의 행동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묘사함으로써,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비판을 증대시킨다.

번호	댓글 내용
1	정신줄줄 챙겨라 웃은 알아서 벗고
2	수많은 시민들이 죽은 참사 현장에서 즐겁다는 듯 웃고 있는 진상이네. 이런 놈은 즉시 해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30분 전인 새벽 4시 10분에 이미 홍수경보를 발령했는데 행정당국이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으니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장례비를 지급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3	내려와라. 뭘 정신으로 저 처참한 현장에서 웃고있나. 꼴보기 싫다.
4	인재로 판단되면 관련자들 책임지게 하고 징계해라. 걱정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권의 태도다. 재난에서는 알아서 살아남는 것이 매뉴얼인 것 같아 답답하다.
5	견인차를 방해하며 인터뷰한 원희룡이나 히죽히죽 웃는 도청 국장이나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들이 윤정부에 수두룩

오송 참사 당시, 공무원이 참사 현장에서 웃는 장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고, 이 보도는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댓글 데이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이 공무원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한 댓글은 "수많은 시민들이 죽은 참사 현장에서 즐

겁다는 듯 웃고 있는 진상이네. 이런 놈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며, 공무원의 행동을 심각하게 규탄했다. 이와 같이 대중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보여준 태도가 공공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느끼며,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재난 보도의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는 공공의 신뢰를 받으며 위기 대응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공공의 불신을 야기하며,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켜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 ◆ 보도 프레임에 대한 비판

번호	댓글 내용
1	별거 아니다. 호들갑 마라...웃든 울든 본질이 아니다.
2	웃으려고 한건 아닌듯 윗분 말들다 멋쩍어서 나온 표정일듯..
3	단순히 한 장면만 가지고 기사화하지 마라. 앞 뒤도 없고 그 보다 더 정치 경제 곳곳에 가치있는 뉴스나 보도해라
4	욕백일려고 썼나본데 저상황이라도 지가 평생 만날일 없는 유명인 만나면 저렇게 인사할때 자동으로 미소나옴. 예의있게 인사 응대할때는 미소 나오는것임. 니들은 안그럴거같냐? 갑자기 대통령와서 니들이랑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니네도 다 미소나옴.

한편,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과는 달리, 언론의 보도 방식과 프레임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댓글은 보도가 공무원의 일탈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

했다. 예를 들어, 한 댓글은 "마녀사냥을 하는 듯 보이는 보도는 본질을 벗어난다"라고 지적하며, 언론이 사건의 원인이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wdfa\*\*\*\*** 2023.07.17. 10:26 팔로우 ⋮

기자 선동질 그만해라이 기사 쓴 기자는 상갓집에 가든 남의 슬픈 일에 잠시라도 웃지 마라 이런 걸로 선동하면 똑같이 돌려받는다...

답글 1 👍 17 🗨️ 2

**chan\*\*\*\***  
2023.07.17. 02:05  
①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jmk5\*\*\*\*** 2023.07.17. 08:58 팔로우 ⋮

저사람이 설마 나쁜이도로 웃었겠나?악의적인 편집은 좀 아닌듯

답글 👍 12 🗨️ 0

 **sin8\*\*\*\*** 2023.07.17. 11:13 팔로우 ⋮

기자들이 문제가 많구만. 하필 웃고 있는 장면을 캡쳐해서 찍어선동질을 하는구만. 그러면 인간인데 어떻게 계속 침울한표정을 짓고있어야만하나? 그게 오히려 더 가중스럽게 보일것같은데

답글 👍 11 🗨️ 0

 **k12j\*\*\*\*** 2023.07.16. 21:33 팔로우 ⋮

상탁하부정.윗물이 탁하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남탓뿐인정권 무었을 바랄까

답글 1 👍 15 🗨️ 5

이러한 관점은 언론의 재난 보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특정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그 과정에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송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지만, 언론이 공무원의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러한 구조적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이 재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공 담론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보도 효과와 사회적 영향

언론의 재난 보도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보도의 프레임과 내용이 감정적 반응을 얼마나 자극했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각한 기사 제목은 “오송 참사 현장서 '히죽히죽' 총복도청 국장 못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대중의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댓글이 해당 기사를 읽고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고, 이는 댓글에서 사용된 단어와 어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저게 싸패가 아니면 뭐냐? 전국민이 걱정하고 침통한 사건인데 그 현장서 쳐웃고 있네”라는 댓글은 감정적 표현을 통해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사와 댓글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함에 따라,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다뤄졌다. 이는 재난 이후 사회적 담론이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재난의 근본 원인이나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론 보도의 자극적인 프레임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재난 보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 저널리즘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재난 보도에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서,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전달하고 공공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오송 참사 보도에서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첫째,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중의 반응은 언론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언론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공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회적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극적인 프레임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보도 프레임에 대한 비판은 언론이 재난 보도에서 구조적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난의 원인과 대응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단편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행동에만 집중할 경우, 대중의 인식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재난 대응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 보도에서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문제를 포괄하는 보도를 통해 공공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적 문제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재난 보도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대중이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행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분석적인 보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송 참사 보도와 관련된 댓글 분석을 통해, 재난 보도에서 언론의 역

할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중의 반응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언론이 공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의 자극적인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적 논의가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이 재난 보도에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재난 보도는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언론 프레임의 상호작용은 재난 보도의 중요한 요소로,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담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강조하며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때, 재난의 구조적 원인은 가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사건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중이 재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 대응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균형 잡힌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

## 9. 유가족과 피해자 비난 댓글 양상

**사** 회적 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며, 재난 이후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들이 겪는 2차 피해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재난 이후 유족들이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혐오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는 유족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구체적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2차 피해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 유족 비난의 세 가지 경향

유족을 향한 비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 전가에 대한 비난, 보상 요구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혐오적 언어 사용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족들이 재난 이후 겪는 고통을 악화시키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 ◆ 책임 전가에 대한 도덕적 비난: "국가탓", "남탓" 비난

많은 댓글에서 유족들이 재난의 책임을 국가나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유족들이 재난의 구조적 문제나 관리 체계의 결함을 지적할 때, 대중이 이를 "국가탓"이나 "남탓"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며, 구

조적 맥락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고통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댓글이 이를 반영한다:

"남탓만 하는 유족들, 자기들 책임은 없다는 거냐?"

"또 국가탓, 정부탓만 하네. 본인들은 뭐 했냐?"

이러한 비난은 유족들이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부 대중의 반응을 반영하며, 재난의 원인과 그 대응 방식에 대한 공적 논의가 사적 비난으로 왜곡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남탓만 하지 말고..."와 같은 표현은 유족들이 자기반성 없이 외부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유족들이 겪는 복합적 감정과 재난의 맥락을 단순화하며, 대중이 유족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보다는 반감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 보상 요구에 대한 반감: "보상만 바라는 유족들" 비난

재난 이후 유족들이 국가나 기관에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종종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된다. 일부 대중은 유족들의 보상 요구를 경제적 이익 추구로 간주하며, 그들의 요구를 경멸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을 남긴다. 예를 들어:

"유족들 결국엔 돈 얘기하는구나."

"보상만 바라는 유족들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러한 반응은 유족들의 피해와 상실을 경제적 이익과 연관지어, 그들의 요구를 '기회주의적' 행위로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족들이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시체팔이 시작하냐?"

"죽은 사람 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 유족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겪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유족들이 보상이나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일부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왜곡하여 비난한다. 이는 유족들의 요구와 행위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왜곡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띤다.

#### ◆ 혐오적 언어 사용과 2차 가해: 혐오적 수사와 정서의 강화

많은 댓글이 유족들에 대해 직설적인 혐오를 담고 있다. 특히, "시체팔이"라는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유족들이 재난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유가족을 향한 부정적 시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태도는 유족들의 슬픔과 요구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한 불만으로 축소하고, 대중이 유족들에게 공감하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비난 댓글들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 대한 혐오 정서를 사회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대중이 유족들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시되거나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유족들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하게 만든다.

유족 비난 댓글의 경향은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하고, 보상 요구를 비도덕적 행위로 비하하며,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혐오와 적대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혐오적 반응은 유

족들이 재난 이후 겪는 2차 피해를 심화시키며, 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사회적 참사 이후 유족들이 요구하는 책임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왜곡되거나 비난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앞으로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에서는 유족들이 겪는 2차 피해와 대중의 혐오 여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유족들이 재난 이후 사회적 지원과 공감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10. 결론 및 제언

**오** 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이후 언론 보도와 대중의 반응이 사건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오송참사 초기 언론 보도는 사건의 긴급성과 피해 상황 전달에 주력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도량이 급감하고, 특정 공무원의 행동을 부각하는 자극적 보도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재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논의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심도 있는 보도가 부족한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 이후 재난 대응 체계의 결함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댓글 문제는 언론 보도가 설정하는 프레임에 따라 대중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보도는 재난의 구조적 문제나 재난 대응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소홀해지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 보도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사회적 변화와 정책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론의 재난 보도가 자극적인 감정 유발을 피하고,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공감과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제언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재난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론 보도의 양상과 윤리적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송참사 보도 사례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분석하고, 재난 보도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행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사건의 발생 초기 단계에 주로 적용되며, 사건 이후의 장기적 보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미흡하다. 재난보도가 초기의 긴급성을 넘어서 구조적 원인 분석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책임 있는 보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대신, 재난의 원인과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재난 보도가 공공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 댓글은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러한 반응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보도 체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은 지역 참사가 공론장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의 보도 차이를 분석하여 재난 보도의 불평등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보도 강화와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참사가 전국적 담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 주제를 다뤄야 한다. 지역의 재난 상황이 공정하게 보도되기 위해서는 전국 언론이 지역 언론과 연계하여 보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혐오 댓글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의 발생 양상과 심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재난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난 보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